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7 5급(가) 24번]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첫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이라도 선고 전에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둘째,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판결은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 또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후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셋째,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상 황>—————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甲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11월 1일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은 甲에게는 2016년 11월 10일 송달되었고, 乙에게는 2016년 11월 14일 송달되었다.

- ① 乙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 ② 甲이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같은 날 판결은 확정된다.
- ③ 甲이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 취하한 때 판결은 확정된다.
- ④ 甲과 乙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
- ⑤ 甲이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문 1. 정답 ④

예설

- ① : (×)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다. <상황>에서 乙은 승소했으므로 상소가 불가하다.
- ② : (×)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황>에서 판결문은 甲에게 2016년 11월 10일 송달되었다. 따라서 甲은 11월 28일이 아닌 11월 24일까지 상소를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甲이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4일에 판결은 확정된다.
- ③ : (×)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후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따라서 甲이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 취하한 때가 아니라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된다.
- ④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하급심 판결이라도 선고 전에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甲과 乙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판결은 선고 시인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
- ⑤ : (×) 네 번째 문단이 근거이다.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이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은 2016년 11월 21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는?  
[18 5급(나) 16번]

- 甲지역에는 7개의 도시(A ~ G)가 있다.

○ E, F, G는 정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B는 C로부터 정동쪽으로 250 km 떨어져 있다.

○ C는 A로부터 정남쪽으로 150 km 떨어져 있다.

○ D는 B의 정북쪽에 있으며, B와 D 간의 거리는 A와 C 간의 거리보다 짧다.

○ E와 F 간의 거리는 C와 D 간의 직선거리와 같다.

○ G는 D로부터 정동쪽으로 350 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A의 정동쪽에 위치한 도시는 F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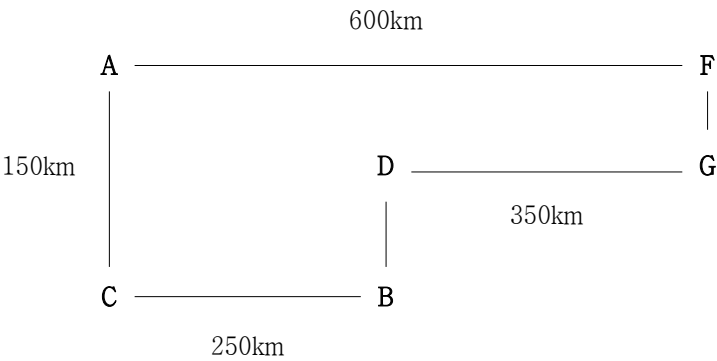
※ 모든 도시는 동일 평면상에 있으며, 도시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B
- ② D
- ③ E
- ④ F
- ⑤ G

문 2. **정답** ③

**예설**

- (1) <조건 3>에 의해 A의 정남쪽 150km 지점에는 C가 위치해 있다.
- (2) <조건 2>에 의해 C의 정동쪽 250km 지점에는 B가 위치해 있다.
- (3) <조건 4>에 의해 B의 정북쪽에는 D가 위치해 있으며, 이 거리는 150km 미만이다.
- (4) <조건 6>에 의해 D의 정동쪽 350km 지점에는 G가 위치해 있고, A의 정동쪽에는 F가 위치해 있다.
- (5) <조건 2>에서 E, F, G는 정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므로 F는 A의 정동쪽 600km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도시들의 위치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 (7) <조건 5>에서 E와 F 간의 거리는 C와 D 간의 직선거리와 같다고 하였다. C와 D 간의 거리는 직각삼각형 CDB의 빗변의 길이이므로 밑변인 250km보다 길다. 따라서 E는 F의 정북쪽 혹은 정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그 거리는 250km를 초과하여야 한다.
- (8) 이때 E가 F의 정북쪽 혹은 정남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간에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는 E이다.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15 5급(인) 11번]

중세 초기 아일랜드 법체계에는 자유의 몸인 사람을 모욕할 경우 모욕한 사람이 모욕당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인 ‘명예가격’이 존재했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어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었다. 이는 주교의 명예가격과 동일했다. 주교를 모욕했을 경우 젓소 10마리나 은 20온스를 지급해야 했다. 부유한 농민의 명예가격은 젓소 2.5마리에 그 사람에게 딸린 하인 한 사람 당 젓소 0.5마리를 더한 것이었다.

명예가격은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했다.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범죄자는 살해에 대한 배상인 10쿠말 외에 명예가격을 따로 없어 지급해야 했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존엄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부상에 대한 배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 상처나 부상을 입히면 그 상해에 대한 가격에 명예가격까지 지급해야 했다. 왕이나 영주 또는 주교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2쿠말, 부유한 농민의 경우는 젓소 2마리, 소작농이나 다른 남자의 경우는 젓소 1마리, 그리고 여성이나 아이의 경우는 은 1온스를 상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훔치거나 손해를 끼친 재산가치의 세배의 배상액에 소유자의 명예가격을 더하여 지급해야 했다.

영주의 보호를 받는 소작농이나 영주의 아내 또는 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살해, 부상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영주의 명예가격도 해당 사안 각각에 따로 청구되었다.

—————<상 황>—————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교를 죽이고, 영주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영주의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각각 하인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농민 2명을 죽이는 큰 사고를 냈다.

- ① 은 209온스
- ② 은 219온스
- ③ 은 229온스
- ④ 은 239온스
- ⑤ 은 249온스

문 3. 정답 ②

예설

(1)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 네 번째 문장에 따라 ‘5쿠말 = 젓소 10마리 = 은 20온스’가 된다.

(2)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 황	해당 배상금	명예가격
주교 살해	10쿠말	5쿠말
영주 상해	2쿠말	5쿠말
영주 아내 상해	은 1온스	5쿠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인 영주의 명예를 훼손)
부유한 농민 2명 살해 (각각 하인 10명씩 거느리고 있음)	10쿠말 × 2명 =20쿠말	(젓소 2.5마리+젓소 0.5마리×10명) × 2명 =젓소 15마리

(3) 위의 수치들을 모두 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 황	해당 배상금	명예가격
주교 살해	은 40온스	은 20온스
영주 상해	은 8온스	은 20온스
영주 아내 상해	은 1온스	은 20온스
부유한 농민 2명 살해 (각각 하인 10명씩 거느리고 있음)	은 80온스	은 30온스
합 계	은 129온스	은 90온스

(4) 따라서 은으로 환산한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은 219온스이다.

[참 고]

(1)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 네 번째 문장에 따라 5쿠말과 젓소 10마리, 은 20온스가 각각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배상액과 명예가격을 구분하여야 한다.

(3) <상황>에서 영주의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린 행위는 영주의 보호를 받는 영주의 아내를 다치게 한 것이므로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영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다.

[운영 전략]

<상황>에서 4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각 사건마다 살인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금과 모욕에 대한 배상금인 ‘명예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매우 많다. 또한, 쿠말, 젓소, 은과 같은 여러 가지 낯선 단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상황판단 기출 문제 중 반드시 넘겨야 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실전에서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40번 문제까지 다 접한 이후에 남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19 5급(가) 26번]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

②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병과한다.

<상 황>

-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① 1,400만 원                      ② 2,000만 원
- ③ 2,300만 원                      ④ 2,400만 원
- ⑤ 2,500만 원

문 4. 정답 ④

해설

- (1)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i) 제1항 제1호 나목 : 甲의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은 2018. 1. 15.이고, 신고일은 2018. 4. 2.이므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해태기간은 1개월 이하이다. 甲의 실제 거래가격은 5억 원으로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 ii) 제2항 제1호 나목 : 甲은 실제 5억 원에 거래하였지만 3억 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는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2억 원)이 실제 거래가격(5억 원)의 40%로 20% 이상이므로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이다. <상황 1>에 따르면,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1,500만 원(= 5억 원 × 0.01 × 3)이다.
- (2)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i) 乙의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은 2018. 2. 1.이고, 신고일은 2018. 2. 5.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
- ii) 제2항 제2호 나목 : 乙은 입주권을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는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1억 원)이 실제 거래가격(2억 원)의 50%로 20% 이상이므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800만 원(= 2억 원 × 0.04)이다.
- (3)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병과되므로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2,400만 원(= 100만 원 + 1,500만 원 + 800만 원)이다.